



“사죄드립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주선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난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19대 대선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악 피했다” 한숨 돌린 국민의당

檢 “안철수·박지원·이용주 제보조작 연루 증거 없어”

김인원·김성호 불구속 기소...박주선 “관련자 문책 착수”

검찰이 지난 31일 오전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사건 결과를 발표하자 국민의당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의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검찰이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 ‘윗선’이 이번 사건에 관련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 “윗선 개입 증거 없다”=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들은 구속된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

회견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과는 달리, 국민의당의 조직적 개입이나 당 ‘윗선’의 관여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는 제보를 조작했으며, 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인원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은 조작된 제보를 부실하게 검증·발표했고, 당시 후보와 당 지도부가 개입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부단장과 김 전 수석부단장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조작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주도했다. 이들은 이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들이 사건에 관련한 정도를 고려했을 때 구속하기에 적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 의원, 안 전 대표는 제보조작과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에 연루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도 “낮은 자세로 분위기 반전 고심”=검찰 수사 결과를 접한 국민의당은 당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만큼 신중하고 낮은 자세를 이어가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상당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당이 ‘새출발’하는데 발판은 마련됐다는 목소리도 일부 감지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팽팽한 긴장감 속에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11시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당에서는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국민의당 자체

조사 결과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한 국민의당은 당 대선 후보와 상임선대위원장, 비대위원,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제차 고개를 숙였다.

사과문을 낭독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제보도 명확히 검증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한 당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당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 당헌·당규에 따라 문책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다음에...” 전대 출마 즉답 피한 안철수

비대위·의총 연석회의 참석...모호한 행보 논란 증폭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31일 8·27 전당대회 출마 문제와 관련,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는 안 전 대표가 판을 정리하기 보다는 또다시 모호한 행보에 나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의원총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자리”라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다시 언급한 뒤 자리를 피했다.

앞서 안 전 대표는 지난 29일 일부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전대 출마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원외 지역위원장이들 전한 바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현재 당 내의 인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 과정”이라며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전대 도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 안 전 대표가 전대에 출마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 전 대표는 더욱

낮은 곳으로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입장 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오는 11일 전당대회 출마등록 마감일까지 안 전 대표의 행보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전대를 앞두고 강력한 혁신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전 대표의 등판론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전대를 통해 지도부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부 주자들은 안 전 대표 ‘등판론’을 제기하며 안 전 대표 지지 표심의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제보조작 재판서 진실 밝혀지길”

국민의당 수사 결과 발표 각 당 반응...바른정당 “특검 필요”

검찰이 지난 31일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추가적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박원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유미씨의 단독법행이라는 국민의당의 자체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더욱더 명백해졌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낱알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꼬리자르기식 부실 자체조사를 한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사건을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재판 상황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과 제보조작 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국회는 이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의 진상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다 낱알이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제보조작 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인적쇄신 분위기 고조

혁신 첫 과제 선정...박근혜 출당·친박계 청산 거론

자유한국당에서 당내 인적쇄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무총장이 당 조직 혁신에 나서기로 했고 혁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옛 친박근혜(친박계) 인적쇄신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지난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당원협의회 조직혁신’을 들고 나왔다. ▲일반·책임당원 배가 ▲체육·직능 등 생활조직 활성화 ▲정년과·여성 조직 활성화 ▲현지실사·여론조사 등의 매뉴얼에 따른 당무 감사 실시 ▲부실당협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골자다. 홍 사무총장은 당원협의회 조직혁신 기간을 2~3개월로 잡았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상당수 구(舊) 친박계가 청산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박작

터 나아가 한국당 최혜백 혁신위원은 박 전 대통령 출당과 옛 친박계 청산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최 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전부 측근 비리와 아들 비리 문제로 출당되다시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또 “보수가 몰락한 첫 단추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납득할 수 없는 인물, 친박으로 공천하려고 했던 총선 아닌가”라며 “책임을 엄중하게 물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범위를 너무 확산시켜도 안 되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선버스업 ‘무제한 근로 허용’ 제외

한노위, 특례업종 26종→10종 축소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영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뤘고, 추후 회의에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여객운송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여야는 최근 운전기사의 출몰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

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합의를 이뤘다.

한 의원은 “워낙 운수업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서 해당업종이 타이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특례업종에서) 빠지게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법의 시행시기와 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업종의 추가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격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